"尹 부부 의혹 모두 진상규명 완수"

민주, 전당대회서 '윤 정권 국정농단 진상규명 결의안' 채택

"국민 삶에 관심 없고 권력 유지 올인… 역사상 최악의 정권
김건희 의혹에 검찰은 황제조사… 국민들의 인내심 시험중"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전국 당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윤석열 정권 국정농단 진상규명 결의안'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국정농단에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이르렀다"며 "해병대 수사외압 및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의혹 등 모든 진상규명을 반드시 완수한다"고 결의했다.

결의안은 모경종 민주당 의원과 이현 부산진구을 지역위원장이 대표로 낭독했다.

민주당은 결의안에서 "윤 정권은 국민의 삶과 미래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권력 유지에만 올인하고 있다"며 "국민은 지금, 역사상 최악의 정권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민은 진실을 밝히라고 명령했으나 윤 정권은 특검법 거부로 거듭 짓밟았다"며 "나라를 지키다 허망하게 떠난 해병대원 죽음의 진실을 비정한 윤석열 정권은 끝까지 은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부터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의혹까지 법 앞에 성역 없다고 큰 소리 치던 검찰은 김 여사를 황제조사하며 국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해병대 수사외압 및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의혹 등 모든 진상규명을 반드시 완수한다"고 결의했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두고는 "국정농단을 은폐하기 위한 방송장악 야욕도 끝이 없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을 반드시 저지한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윤 정권에 맞서 당원과 함께, 국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18일 오전 10시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참석자들이 참배를 하고 있다.

"도민 손 잡고 성공 위한 도전 멈추지 않을 것"

김관영 지사,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 참석

"행동하는 양심으로 살아오셨던 삶 · 역사 잊지 않겠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 국립서울현충원 묘소를 찾아 추모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김관영 도지사는 18일 오전 10시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김대중평화센터가 주관해 거행된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대표, 전병헌 새로운미래 대표, 홍철호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을 비롯해 노재헌·김현철·노건호 등 전직 대통령 자제들과 함께 참석했다고 밝혔다.

추도식은 김성재 김대중평화센터 상임이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각계인사의 추모사와 김홍업 이사장 등 유족 인사가 이어졌고, 이후 대통령 묘소로 이동해 헌화와 분향을 진행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추도식장에 도착해 유족과 인사를 나눈 뒤 헌화와 분향을 하며 참배했다.

김 지사는 "올해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태어나신 100주년이자 서거 15주기이다"며 "민주주의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일생을 행동하는 양심으로 살아오셨던 김 전 대통령의 삶과 역사를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대통령께서 국민과 같이 가야 한다. 국민의 손을 잡고 앞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전북을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 도민들의 손을 꼭 잡고 함께 성공을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고 피력했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 SOC 적정성 '적합'은 당연한 결과"

민주당 소속 전북자치도의원들 "현 정부, 도민께 사과해야
재수립중인 새만금 기본계획에 전북도 의견 적극 반영하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난이(당내 대변인, 송천2동 덕진동 팔복동)의원은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지난 16일 오후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 '적합'은 당연한 결과"라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 정부는 전북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난이 의원은 성명서에서 "현 정부는 지난해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전가할 뿐만 아니라, 새만금 SOC ′24년 예산안 78% 삭감 등을 통해 새만금을 정치적인 수단으로 사용했다.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을 실시해 새만금 SOC 사업이 전면 중단하기에 이르렀다."며 전북도민을 향한 홀대를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국토부의 새만금 SOC 사업의 적정성 검토 용역은 지난 30년간 진행되어 온 새만금 개발사업 자체를 전면 부정한 것이다."며, "새만금은 투자와 예산의 검증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정부는 적정성 검토를 추진하여 새만금을 지키려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이미지를 전국민적으로 하락시켰다."고 말했다.

그리고, "새만금 SOC 사업의 적정성 검토 용역에서 당연하게도 적법성 등 5개 지표가 적합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것은 새만금 SOC 사, 용역을 한 정부의 판단이 잘못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만금 사업은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2030년까지 전체 개발계획 면적의 78.1%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공항, 철도, 도로 등 새만금 SOC 사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공사 관계자들과 전북 건설업계는 공기(工期) 증가와 사업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겪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연구 용역 추진부터 결과 도출까지 정부의 태도는 전북자치도민이 새만금에 가지고 있던 기대와 희망을 저버린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이는 새만금 사업추진에 대한 동력과 의지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말하며, "정부는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지난 8개월 동안 공정이 전면 중단된 점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따라서 정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당위성이 재확인된 만큼, 공항·철도·도로 등 새만금 SOC 사업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새만금 SOC 예산을 빌미로 잼버리 파행에 대한 정치적 보복을 사과하고, 현재 재수립되고 있는 새만금 기본계획(MP)에 전북특별자치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만호 기자

"국가 영혼 죽이는 미친 정권"

이낙연 전 총리, 尹 정부 겨냥해 날 세워

"친일 매국행동 변론인 독립기념관장 앉혀
국가기간방송서 광복절에 기미가요 방송
비극을 막기 위해 광란의 굿판 당장 멈춰라"

KBS가 광복절인 지난 15일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와 일본 전통 복식인 기모노가 나오는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송해 논란이 된 가운데,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국가의 영혼을 죽이는 미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독립운동의 역사는 국가의 영혼이고 이를 기억하고 기리는 것은 국가의 정신적 초석"이라며 "그것을 죽이는 정권은 정상적 정권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윤 정권의 작태가 그렇다. 독립운동을 왜곡하고 친일 매국행동을 변론하는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에 앉혔다"며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정부 주도 광복절 기념식을 거부하고 광복회 주도 광복절 기념식을 따로 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주도 기념식에서는 독립운동과 광복의 역사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건너뛰고 딴소리만 했다"며 "국가기간방송이 하필이면 광복절에 기미가요와 기모노를 국민에게 듣고 보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이 정도면 미친 정권, 미친 세상"이라며 "목숨을 걸고 재산을 내놓고 후손들의 안온한 삶까지 포기했던 독립운동의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면서 어떻게 국가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우리 주권에 대한 일제의 간악한 강탈과 그에 대한 비열한 부역을 지금도 교묘한 논리로 두둔하고 호도하면서 어떻게 국가의 영혼을 지키겠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 전 총리는 "지킬 것은 지키는 것이 보수"라며 "국가의 영혼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짓밟는 작금의 난장은 보수도 아니다. 그것은 보수를 참칭하는 매국"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국가를 유지하려 한다면, 국가의 영혼을 지키려 한다면, 독립기념관장을 즉각 내보내고 이 광란의 굿판을 당장 멈추라. 그것이 이 정권의 비극을 막는 최소한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5일 0시 KBS 1TV에 방영된 'KBS 중계석'은 올해 6월 29일 예술의전당에서 공연된 오페라 '나비부인' 녹화본을 내보냈다.

광복절에 기모노와 기미가요가 공영방송에 등장하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 시청자가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 올린 비판의 글은 이날 오후 1시까지 1만명 넘는 동의를 얻었다.

/김재훈 기자

"행동하는 양심 따를 것"

우원식 국회의장, 김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모식 참석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께선 민심을 무시하는 정치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하셨다. 대통령의 신념과 헌신을 가슴에 새기고 따라 행동하는 양심으로 평화로운 남북관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자"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립 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김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갈등과 위기가 중첩되고 나라의 정체성과 민주주의, 민생, 평화가 흔들리고 있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더욱 또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애 마지막 연설에서 말씀하신, 그래서 유언과도 같은, '행동하는 양심으로 평화로운 남북관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자고 하신, 바로 그 길, 그리고 또 어떤 외세로부터도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이 또렷한 나라, 그 길이다. 어떻게든 길을 뚫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나날이 대결로 치닫고, 한반도 평화가 흔들리는 지금, 대통령님 같은 지도자가 계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하루하루 절감한다"며 김 전 대통령을 기렸다. /뉴시스

새만금청 "이차전지 처리수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14일 언론에 보도된 〈어민들 "새만금 해상에 이차전지 폐수 방류되면 궤멸적 피해"〉와 관련, 다른 화학물질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내용은 사실과 상이하다고 16일 밝혔다.

새만금청은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서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54개 항목을 준수해 공공수역으로 방류해야 한다"며 "배출허용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미지의 물질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생물체로 생태독성을 조사하고 기준 초과 시 방류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새만금청은 "해양방류의 경우에도 염 증명 제도를 통해 생태독성을 관리해 나가고 있다"며 "새만금 산업단지 내 입주예정인 외해 방류기업들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자체처리 후, 염 증명을 함께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차전지 처리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4일 군산시·부안군·고창군 어민들은 '새만금 이차전지 폐수 해양방류 반발 집회'를 열고 새만금개발청의 이차전지 폐수 해양방류 계획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이만호 기자

검찰 문 전 대통령 부부 계좌 추적에

청와대 출신 민주 의원들 "정치 보복"

전주지검 "4년간 스토킹 수준으로 수사했다는 말 사실과 달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6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계좌를 추적 중인데 대해 "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고민정·김영배·민형배·윤건영·정태호·진성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정치보복 수사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는 명백한 정치보복"이라며 "취임 첫날부터 전임 정부 괴롭히기에만 골몰하던 윤석열 정부는 대체 언제까지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에만 몰두하려는지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관련 수사는 검찰이 무려 4년 동안 스토킹 수준으로 대통령의 주변을 탈탈 턴 수사"라며 "검찰은 처음부터 그림을 그려 놓고 수사를 시작했다. 4년 동안 탈탈 털고도 그 그림에 맞는 퍼즐이 나오지 않자 이제는 전임 대통령을 모욕주는 방식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검찰이 원하는 대로 수사가 되지 않으면 늘상 쓰는 익숙한 패턴이다. 법정에 세울 증거는 없으니 언론을 통해 괴롭히는, 없는 죄의 냄새만 고약하게 피우는 못된 습관"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전 대통령의 사위가 취직을 해 월급을 받은 것이 뇌물이라면 대통령의 가족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말이냐"며 "숨도 쉬지 말아야 한다는 소리냐"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결론을 정해 놓고 하는 보복 수사는 수사가 아니라 정치 개입"이라며 "정치검찰의 끝은 파멸임을 잊지 말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 추적이) 광범위한 통신조회가 벌어진 지난 1월 경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금융계좌를 들여다본 것은 지난 1월에 집중됐고,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그 이전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계좌 추적 관련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검찰 수사와 관련한 문 전 대통령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보고는 됐지만 문 전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했는지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고 의원은 "검찰 독재정권의 마지막 발악"이라며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목표치까지 이뤄내지 못하는 현실에서 시선을 밖으로 돌리자는 검찰의 악랄한 수법을 다시 쓰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지검은 "이스타항공 운영을 둘러싼 여러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수사상 필요성과 공소시효 임박 여부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수사 및 공소유지를 하고 있다"면서 "문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4년간 스토킹 수준으로 수사했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뉴시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